

# 현안과 과제

■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변화가 필요하다!

## Executive Summary

### □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변화가 필요하다!

#### ■ 약화되고 있는 수출의 경제 기여도

최근 국내에서는 수출 지향형 성장 전략의 전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.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'80~'00년대 1.0%p에서 '10~'14년 0.6%p로 축소되었다. 또,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구성비는 '90년 대비 '12년 11.2%p나 상승했지만,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동기간 0.696에서 0.514로,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당 65.4명에서 7.7명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연관효과도 약해졌다.

#### ■ 수출 지향형 성장 지속 가능성 점검

향후 우리 경제가 수출 지향형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기업, 가계, 국민소득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**우선,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력이 약화되었다.** 국내 순상품교역조건은 '11년부터 100을 하회, '14년에는 89.9 수준에 그쳤다. 이런 가운데 제조업 총자본투자효율성은 '04년(26.2%), 부가가치율은 '02년(25.0%) 수준에 못 미치는, 19.5%, 21.3%('13년)에 그쳤다. **다음으로, 제조업 수익력이 크게 약화되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정체되었다.**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'13년 5.3%까지 하락하면서, 노동소득분배율도 '00년대 중반 수준에 못 미치는 62.4%에 머물고 있다. **또,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고용과 소득 등 가계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.** 최근 고용률이 60.2%까지 상승하면서 실업률은 3%대 중반,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도 30%대 중반까지 하락했다. 하지만, '14년 약 1,216만명에 이르는 상용직 임금 근로자의 50%를 넘는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여전히 존재한다. 특히, 가계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평균 소비성향이 지속 하락하는 등 가계 소비여력이 축소되고 있다. **마지막으로, 국민소득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무역손실이 국부유출은 물론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.**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이익은 2008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, 2008~2013년까지 손실액은 평균 약 18조원으로 동기간 실질 GDP 평균 약 1,278조원의 1.4%에 이른다.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반영하더라도 실질 GDP의 1%에 달해 GNI가 그만큼 축소된 것이다.

#### ■ 시사점

한국 경제가 수출 지향형 성장에서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. **우선, 과도한 수출 지향형 성장 전략에서 내·외수 균형 성장 패턴으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.** 서비스 산업의 발전, 가계 여건 개선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내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 **또, 이를 위해서는 덩어리 규제의 체계적이고 과감한 감축을 통한 투자와 고용 촉진으로 내수 규모의 확대를 피해야 한다.** **다음으로, 수출 부문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를 통해 기업 수익성과 노동소득 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.** **마지막으로, 수입 부품소재나 가공·조립·수출에 의존하는 수출부문의 경쟁패턴 변화 유도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 가속 등이 필요하다.**

## 1. 약화되고 있는 수출의 경제 기여도

- 최근 한국 경제는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의 산업연관효과도 약화되면서 수출 지향형 성장 패턴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

### -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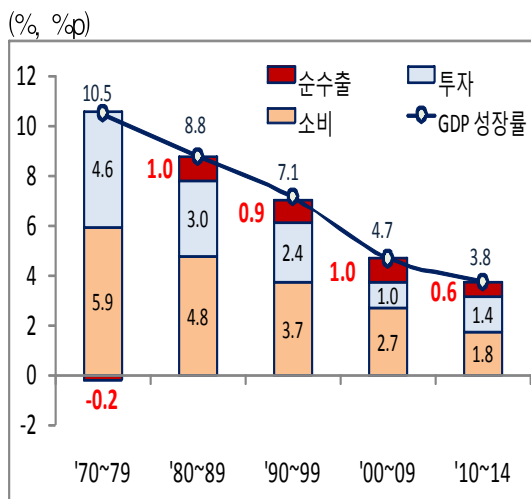
-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1980~2000년대까지 1.0%p 수준을 유지했으나, 2010~2014년 0.6%p로 대폭 축소

### -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약화

-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구성비는 1990년 20.8%에서 2012년 32.0%로 확대되었으나,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동기간 0.696에서 0.514로 하락
- 더욱이,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도 동기간 10억 원 당 65.4명에서 7.7명으로 크게 약화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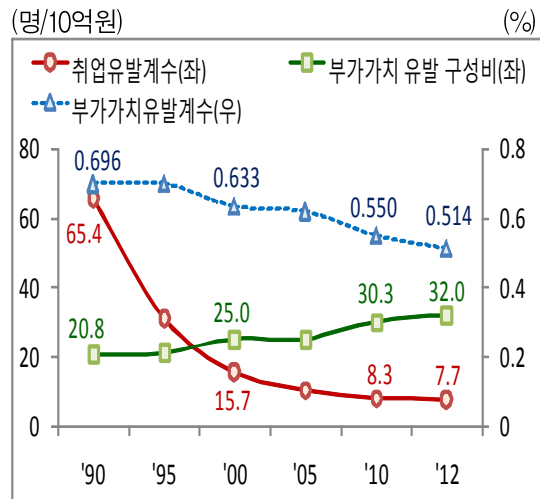
- 이하, 국내 교역조건에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문제점을 기업, 가계, 국민소득 측면에서 살펴보고,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< 경제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.

<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, 산업연관표, 각연도.  
주 : 실측치 기준.

## 2. 수출 지향형 성장 가능성 점검

### ① 교역조건 악화 지속에 따르는 수출 지향형 성장의 한계

○ 교역조건이 악화가 지속될 경우 기업 경영 환경은 물론 가계 여건마저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교역이득의 유출이 가속되면서 국민소득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발생, 궁극적으로는 내수 위축과 성장잠재력 둔화라는 수출 지향형 성장 패턴의 한계에 봉착하게 됨

#### - 교역조건 악화 지속에 따르는 기업 환경 및 가계 여건의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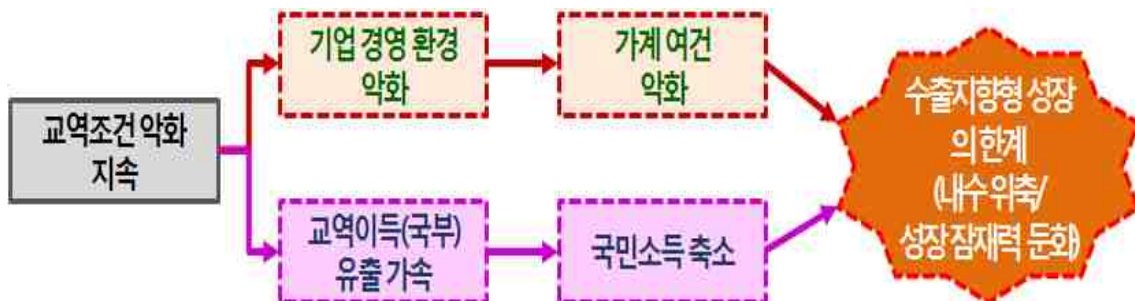
- 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, 국내 기업들은 치열한 가격 경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어 부가가치와 수익률 창출력이 크게 악화
- 이로 인해 가계는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, 노동소득이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가계 전반의 빈곤화가 진행될 우려가 상존
- 특히,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계의 미래 불안감이 증대하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저축이 증가

#### -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국민소득 축소

-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교역이득(국부)의 유출로 국민소득이 축소. 국민들의 체감경기 및 내수 부진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-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한 내수 위축(소비와 투자)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, 수출 지향형 성장의 한계를 가져 올 가능성이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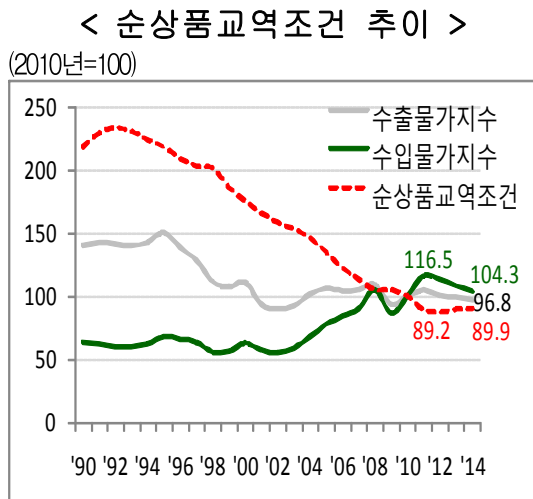
### < 교역조건 악화 지속에 의한 수출지향형 성장의 한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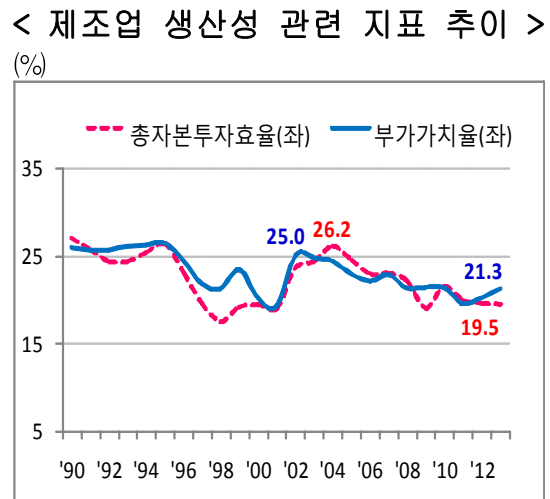
② 국내 경제의 수출 지향형 성장 지속 가능성 점검

○ 교역조건 악화 속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력 개선 미흡1)

-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로 제조업 투자 효율성이 악화되면서 부가가치 창출력 개선이 미흡
  - 국내 수출물가지수(2010년=100, 이하 동일)는 2011년부터 수입물가지수(2010년=100)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
  - 이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도 2011년부터 100을 하회, 2014년에는 89.9 수준에 그침
  - 이런 가운데 제조업 총자본투자효율성은 2004년(26.2%), 부가가치율은 2002년(25.0%)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2013년 각각 19.5%, 21.3%에 그침



자료 : 한국은행.



자료 : 한국은행, 기업경영분석, 각연도.

○ 제조업 수익력 악화 속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세 미약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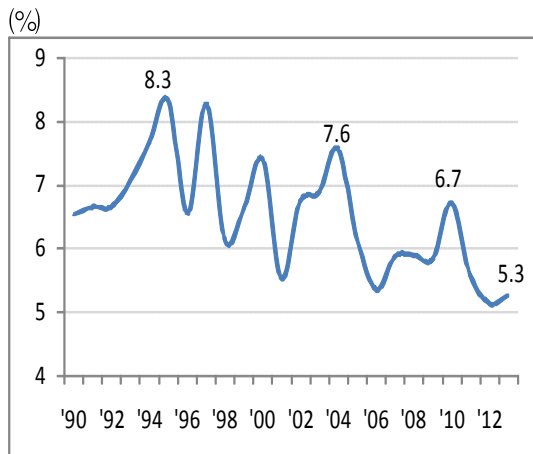
- 국내 제조업의 수익력 악화와 동시에 인건비와 같은 비용 절감 노력이 강화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세도 미약

1)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4차례(1990~1997년, 1998~2007년, 2007~2010년, 2009년~)에 걸쳐 발표된 자료들을 최신 시계열을 중심으로 연결한 것으로 항목별 통계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, 추세적인 경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함.

2) 각주 1 참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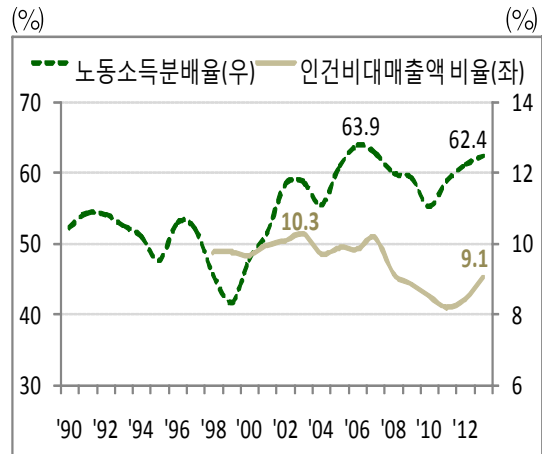
-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여, 2013년에는 5.3%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
- 이처럼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2000년대 초반 10%대 초반에서 최근 9% 내외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비용 절감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
- 이와 같은 이유로 제조업 노동소득 분배율도 2013년 62.4%로 200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무는 등 개선이 지연되고 있음

<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, 기업경영분석, 각연도.

< 제조업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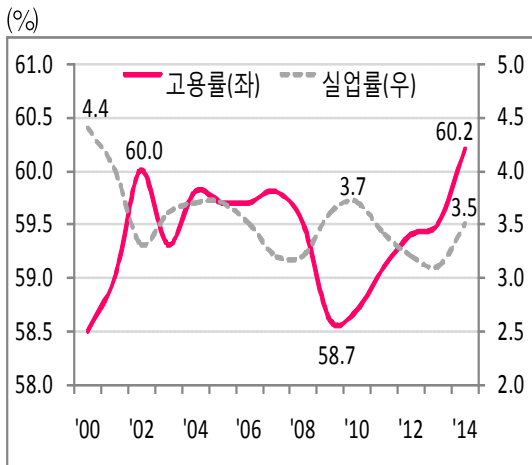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, 기업경영분석, 각연도.

### ○ 고용, 소득 등 가계 여건의 악화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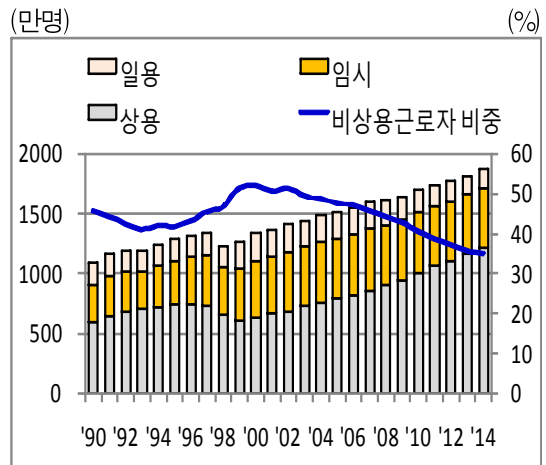
- 고용률 제고로 실업률은 낮지만, 대규모 비정규직 일자리는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이 상존
  - 2008년 58.7%까지 하락했던 고용률이 2014년 60.2%까지 상승하는 등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실업률도 3% 중반 수준에서 추이
  - 이에 따라, 1998년 IMF 사태 이후 50% 이상 수준으로 치솟던 임시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도 최근에는 30%대 중반까지 하락
  - 하지만, 2014년 기준 약 1,216만명에 이르는 상용직 근로자의 50%를 넘는 약 660만명(2014년)의 비정규직 근로자 존재하는 등 고용시장의 구조개선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음

< 국내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.

< 국내 취업구조 변화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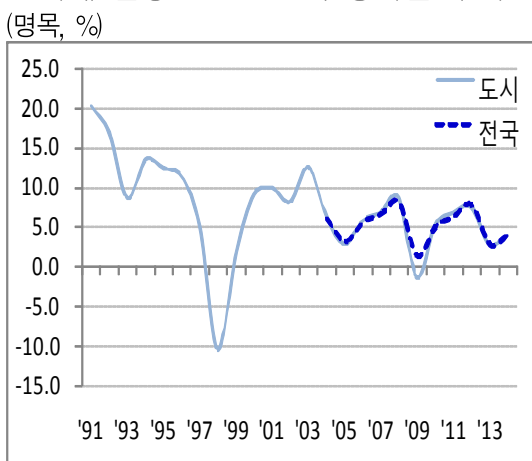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현대경제연구원.

- 가계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평균소비성향도 지속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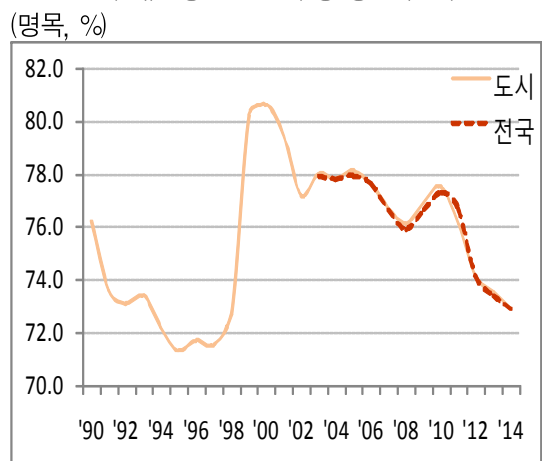
- 도시 2인 이상 전체 가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1990년대 8.7%, 2000년대 6.6%, 2010~2014년 5.1%로 둔화세가 지속
- 이처럼 가계의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가계 평균소비성향(도시 2인 이상 전체 가구)도 각각 73.6%, 77.9%, 74.8%로 최근 들어 하락세로 전환되었음

< 가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, 현대경제연구원.  
주 : 2인 이상 가구 대상 집계.

< 가계 평균소비성향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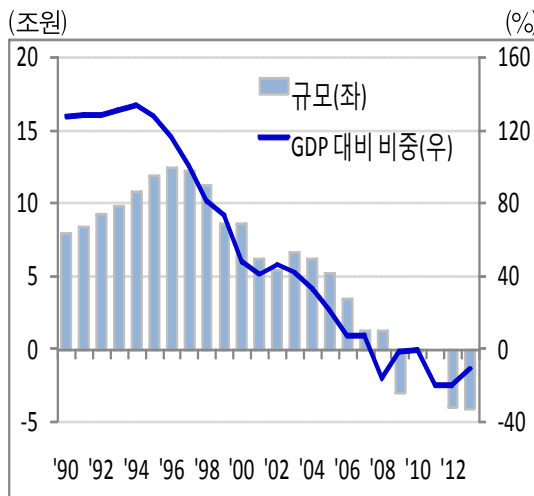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현대경제연구원.  
주 : 2인 이상 가구 대상 집계.



○ 교역손실 확대에 따르는 국민소득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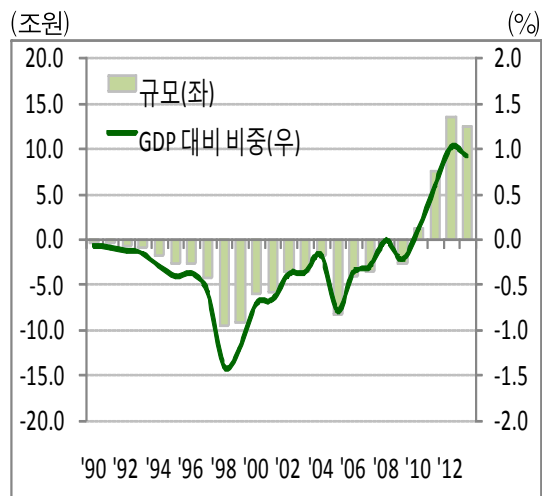
- 최근 들어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세가 실질무역손실 발생 규모에 못 미치는 현상이 지속
  - 1990년대 중반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던 교역조건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이익은 2009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, 2013년에는 18.8조원(실질 GDP 대비 1.4%)의 무역손실을 기록
  - 한편,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2013년에는 실질 GDP의 0.9% 수준인 12.5조원에 달했으나, 여전히 실질무역손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

< 교역조건변화 반영 실질무역이익의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
<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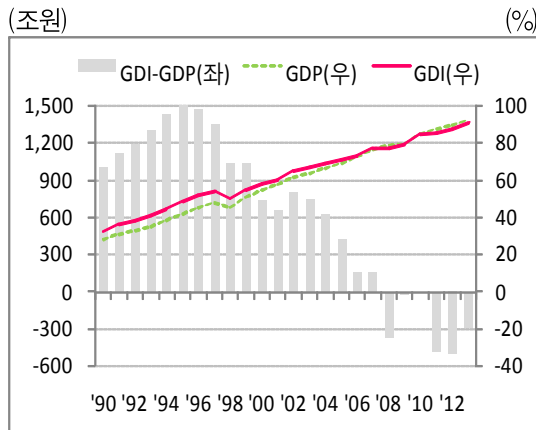
주 :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실질 GNI에서 실질 GDI를 뺀 값임.

- 이로 인해 실질 GDP에 비해 실질 GDI와 GNI의 규모가 축소, 이는 실물 경기와 체감 경기의 괴리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
  - 실질 GDI가 실질 GDP를 하회하기 시작한 2008부터 2013년까지 교역조건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의 손실액은 평균 18.3조원이며, 실질 GDP 대비 비중은 1.4% 수준에 달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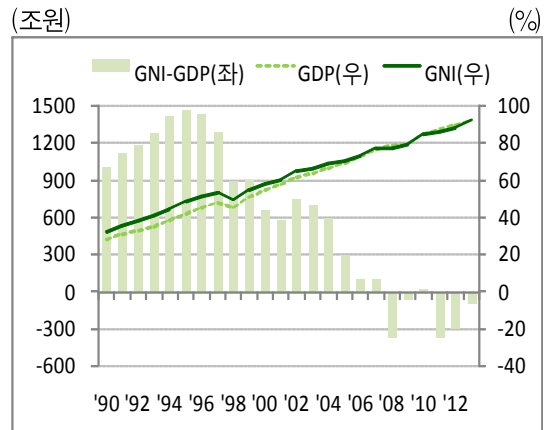
- 한편, 2010년부터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교역조건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의 손실이 GNI를 축소시키는 영향을 감소시켰으나, 이들 두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2008~2013년 실질 GDP 대비 약 1% 수준인 약 12.9조원의 GNI 손실이 발생

< GDP와 GDI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
< GDP와 GNI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
<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이익이 GNI에 미친 영향 >

(평균, 조원)

구 분	1990년대	2000-2007년	2008-2013년
실질 GNI(A)	672	1,008	1,265
GDP(B)	592	977	1,278
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이익(C)	82.8	35.9	-18.3
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(D)	-3.1	-4.5	5.4
A-B	80	31	-13
C/B*100(%)	14.0	3.7	-1.4
((C+D)/B)*100 (%)	13.5	3.2	-1.0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
< 참고 > GNI와 GDI 관계식

- GDI(국내총소득) = GDP + 교역조건 변동에 따르는 실질무역손익
- GNI(국민총소득)
  - = GDP + 교역조건 변동에 따르는 실질무역손익 + 대외 순수취 요소소득
  - = GDI +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

### 3. 시사점

- 최근 한국 경제는 교역조건 악화로 기업경영환경은 물론 가계여건마저 악화되는 가운데 교역이득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소득이 축소되는 등 수출 지향형 성장 패턴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- 우선, 과도한 수출 지향형 성장 패턴에서 내·외수 균형 성장 패턴으로의 전환 노력이 시급
  - 전통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의료, 바이오, 나노, 환경 등의 분야 융·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에 힘써야 함
  - 가계 부채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, 자영업 경쟁력 제고, 벤처 육성 지원 강화 등을 통한 내수 기반 건전성을 확보
- 다음으로, 덩어리 규제의 체계적이고 과감한 감축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내수 규모의 확대를 꾀해야 함
  - 다수 부처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'덩어리규제' 등은 범정부 차원의 '규제 감축 로드맵'을 작성, 체계적이고 과감한 감축 내지는 관리가 필요
  - 규제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비용편익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
  - 정부와 기업 간 '규제유연화 협약제도'를 도입하는 등 특정 규제와 산업현장과의 괴리 발생 시 해당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
- 또, 수출 부문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를 통해 기업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노동소득 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함
  - 기업 R&D, 혁신 인재 육성 및 활용, 기업 생태계 확립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
  - 노동소득 분배 기능 강화는 노사 협의를 넘어서 범사회적인 합의가 필요
- 마지막으로, 수입 부품·소재나 모듈의 가공·조립·수출에 의존하는 수출 부문의 경쟁 패턴 변화 유도, 에너지 정책의 전환 가속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
  - 특히, 에너지 부문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변동이 심해 교역조건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보급 촉진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

이 부 형 수석연구위원 (2072-6306, leebuh@hri.co.kr)